

제주도, LNG발전소 건설 재추진

MB정부 무산됐으나 새정부 공약 포함 ... 2월말 타당성결과 나와

제주도가 이명박 정부 들어 중단된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사업을 재추진한다.

제주도는 최근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제주에 LNG발전소를 건설해줄 것을 건의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제주도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LNG 공급망을 구축하고 애월항 LNG 인수기지도 차질 없이 준공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제주도는 1월23일 관계 공무원들을 지식경제부와 국회에 보내 LNG발전소 건설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LNG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제주도 사용 전력의 18.5%를 해저 송전케이블에 의존하고 있어 전력 자급률이 낮고 해저 송전선로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복구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2006년 4월1일 제주도와 전라남도 해남을 연결하는 해저 송전선로 시스템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장이 발생해 제주도 전역에 최대 2시간30여분 동안 정전사고가 일어나는 등 해저 송전선로 이상으로 정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LNG발전소는 건설비용도 해저 송전선로 설치비용보다 적게 들어 전기요금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했다.

제주도는 30만kW 발전용량의 LNG 발전소를 건설키로 하고 2012년 10월 제주대 전기에너지센터에 타당성 용역을 맡긴 상태이며, 용역결과는 2월 말 나올 예정이다.

용역에서는 정부의 계획대로 전남-제주 구간에 해저 송전선로 제3연계선을 설치하는 방안과 LNG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에 대한 비교검토도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장정호 에너지정책 담당은 “공사하고 있는 LNG 인수기지가 완공되면 LNG 발전소 가동에 문제가 없다”며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면 정부의 에너지공급계획에 반영되도록 절충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06년 수립한 <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2013년 6월까지 LNG발전소 30만kW를 건설키로 했으나 2008년 8월 백지화하고 해저 송전선로만을 증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1/24>